

중견기업 정책 브리프

MIDDLE MARKET ENTERPRISES POLICY BRIEF

FOMEK

vol.4 2022.4.1~4.30

*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정책활동

●●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4.20)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사)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으로 4.20일 63컨벤션센터에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식 겸 제1차 포럼을 개최
-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강훈식,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중견기업 유관기관장,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장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중견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혁신 방안을 모색

정책동향

●● [조달청] 서비스 공공조달 플랫폼 이음장터 개통 (4.1)

- 공공부문의 서비스 수요자와 민간의 공급자가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서비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이음장터’ 서비스 개시
- '22.3월 기준 이음장터에는 위생·방역, 임대, 콘텐츠제작 등 14개 분야, 642개 조달 업체의 1,177개 서비스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점진적으로 거래 가능 대상을 확대할 예정

●● [방위사업청] 국방 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4.4)

- 민간의 첨단·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4.4일부터 5.31일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제안과제 공모
- 핵심기술 과제 공모대상은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및 무기체계 기반 핵심기술로, 세부 공모대상 과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시험개발, 국제 공동연구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등임

* (8대 분야) ①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 첨단기술 기반 개인 전투체계 ⑦ 사이버 능동 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 미래형 첨단 신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4.7)

- 제12회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발표
- 전년 대비 투자를 대폭 확대('21년 5조 1,359억원→'22년 8조 842억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초격차기술과 핵심 인재 양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최종 확정 (4.14)

-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총 603개 기업*을 최종 확정 발표

*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통신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운영사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육성 기술지원 프로젝트 (4.18)

-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혁신의료기기* 육성 기술지원 프로젝트' 추진

* (혁신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구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한 제품 중 20개 제품을 전략적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제출 자료 자문, 시험설계 및 자원공유, 임상시험 자문, 연구정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R&D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 지원 (4.18)

-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설비 및 R&D에 대해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
- 올해 융자규모는 사업장 당 최대 500억원으로, 융자기간은 최대 10년(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최저 1.3% 적용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개편 (4.25)

-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민간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확인제도의 첫 단계인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운영할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산업 활성화 지원 (4.26)

- 중소·중견기업 또는 그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제조 분야에서 재자원화, 친환경설계, 제품서비스 등 순환경제 전 분야, 국내 판로 및 해외 판로개척까지 등을 지원하는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및 기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시행

* (순환경제산업) 사용 후 제품·부품을 원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재제조, 공정스क्र랩 등 폐자원에서부터 유용자원을 추출하여 산업에 재공급하는 재자원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정 (4.27)
 - 5.1일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개(소속회사 2,108개) 가 지정됨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는 지난해(71개, 2,612개) 대비 각각 5개, 274개가 증가하였으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소속회사는 지난해(40개, 1,742개)보다 각각 7개, 366개 증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5.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입법동향

1 정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정 (4.6)
 - 연구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장비 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4.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4.7~4.27)
 - (주요내용)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절차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4.12)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4.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4.12)
 - 데이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4.2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마련
 -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거래사 자격·경력기준 및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요건 마련 ▲데이터 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19)
 - 개정 하도급법 시행(7.12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수급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요청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19일부터 5.30일까지 입법예고
 - (주요내용)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규정 마련, 표준하도급 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규정
- [특허청] 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4.19)
 -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4.20)
 -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음
 -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영업상 정보에 한정

2 국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4.1)
 - 사업자 등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맞춤형 광고임을 소비자에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처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의원, 4.1)
 -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화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 4.7)
 -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30일 전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여부를 예고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병 의원, 4.7)
 -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채용비리 벌칙 등을 명확히 명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 4.12)
 - 채용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함께 근로 시작 예정일, 근로 예정 장소, 업무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4.15)
 - 채용과정 중 또는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면접 등의 절차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4.8)
 - 위탁기업(대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원자재 종류 및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4.8)
 - 일정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에 드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도록 특례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4.14)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현행 2022년)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15의 인건비를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인 경우 인건비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100분의 40, 100분의 25로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 4.14)
 -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 5%p 상향 적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4.12)
 - 안전운임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에 규정되어있는 품목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품목을 공표하도록 함
 - 2022년까지 시범 운영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4.13)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은 교섭단체별 조합원의 수, 교섭단체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4.13)
 -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내 해당 주권상장법인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매도하는 경우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4.14)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가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4.14)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